

국민의힘 전대, 한동훈 언급 '지구당 부활' 쟁점으로 떠올라

與 윤상현, 野 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韓, 투명성 보완하면 큰 부작용 없어 전대·대선서 원외 위원장 표심 겨냥 나경원 등 수도권 원내 당권주자 호응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선출 규칙에 이어 이번에는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당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구당 부활이 화두가 된 셈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다. 그리고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당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자체적인 현수막 게재도 어렵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자.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차떼기'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을 근거로 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도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고, 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진다. 원외 당협위원장(지

역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간 야당 지역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을 내다보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을 노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에 불과해, 원외 위원장들이 더 많다. 현역 국회의원은 영남권이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비영남 지역이 많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원내 당권주자들이 호응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

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사무처에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이권에 개입하는 먹이사슬"이라며 "미국처럼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전당대회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원의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방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남북 '9·19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수준

국가안보실, NSC 실무조정회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 국무회의 상정 군사분계선 훈련·도발 즉각 조치 가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장호진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복합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李 "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의체 설치 제안"

당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바가 있다"며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가 다룰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며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인지 참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총 13명 참석국 정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참석국 정상과 연이어 만나, 공급망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만난 참석국 정상은 총 13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0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30분 간격으로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국 정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난 정상들과 양

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석유화학·IT·통신·원자력·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또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고, 탄자니아와도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 요소를 포함한 EPA를 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크롬·망간·코발트 같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원료가 풍부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